

행정법총론

1.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가 고안해 낸 이론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수용적 침해론 | ② 수용유사침해론 |
| ③ 희생유사침해론 | ④ 희생보상청구권론 |
| 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론 | |

2.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
- | | |
|--------|-----------|
| ① 입영명령 | ② 화장장설치허가 |
| ③ 의사면허 | ④ 예방접종면제 |
| ⑤ 귀화허가 | |

3.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하자승계가 부인된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독촉과 가산금·증가산금징수처분 | ②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급통지행위 |
| ③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| ④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|
| ⑤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| |

4. 다음은 행정절차의 기본 내용 중 이유부기(理由附記)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| | |
|---|---|
| (가) 이유부기는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·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. | (나)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담보하고 쟁송단계에서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미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. |
| (다) 판례에 의하면 이유부기는 단순히 처분의 근거조문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. | |
| (라) 우리나라의 실정법에는 이와 같은 이유부기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. | |

- | | |
|------|------|
| ① 없음 | ② 1개 |
| ③ 2개 | ④ 3개 |
| ⑤ 4개 | |

5. 다음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법의 규정을 나열한 것이다. 이 중에서 그 법리적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?

- 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(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)
- ②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(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)
- ③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(행정대집행법 제2조)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(영업소의 폐쇄)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(식품위생법 제62조제4항)
- 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.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)

6. 행정행위의 문서주의 또는 요식성(要式性)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모든 행정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, 행정법상의 권리·의무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서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.
- ③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구술(口述)에 의한 처분원칙을 취하고 있다.
- ④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개별법으로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35조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.
- ⑤ 요식행위를 위반한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7. 다음 중 통설과 판례상 항고소송의 피고격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
- ②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수임청
- ③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피대리관청
-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경우 당해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
- 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 지방의회

8. 다음 중 일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
| ① 음식점영업허가 | ② 건물철거명령 |
| ③ 교통표지판의 명령 | ④ 어업면허 |
| ⑤ 사립대학 설립인가 | |

9. 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 등에게 심판청구의 가부, 재결청·제소기간 등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.
- ② 고지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 고지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.
- ③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,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.
- ④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에 한하고, 행정심판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.
-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10. 다음 중 현행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절차는?

- | | |
|--------|------------|
| ① 신고 | ② 행정상 입법예고 |
| ③ 행정예고 | ④ 행정지도 |
| ⑤ 행정강제 | |

11.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.
- ② 위법 상태의 계속이 필요하다.
- ③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.
- ④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.
- ⑤ 원상회복이 법적·사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.

12.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된 것은?

- ① 병역법상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
- 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결정
- ③ 공무원에 대한 법정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서면 경고
- ④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
- 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

13. 공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판단표시행위라는 점에서 인식표시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.
- ② 공증은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증거력을 발생한다.
- ③ 공증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.
- ④ 공증은 권리행사요건, 권리성립요건, 효력요건이 되기도 한다.
- ⑤ 공증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.

14.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.
-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지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.
- ③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,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.
- ④ 판례는 무효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.
- ⑤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.

15. 현대 행정법 이론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적용범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거론될 여지가 가장 적은 것은?

- ① 행정작용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중요사항유보설
- ② 국민의 자유,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활동은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
- ③ 수익적 행정작용인 급부행정에도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사회유보설
- ④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권력행정유보설
- ⑤ 행정작용도 권리분립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므로 일정 행정활동에는 행정입법의 근거 규범만 필요하다는 배타적 행정유보설

16. 다음 중 의무자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?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행정상 대집행 | ② 이행강제금 |
| ③ 행정상 강제징수 | ④ 행정상 즉시강제 |
| ⑤ 과징금 | |

17.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분상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는다.
- ② 직무의 범위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.
- ③ 직무집행 관련성은 행위자체의 객관적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④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법령에는 널리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 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다.
- 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.

18.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이다.
- ② 과료는 행정질서벌에 속한다.
- ③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.
- ④ 행정벌과 집행벌은 병과가 가능하다.
- ⑤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.

19. 다음 중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
- ②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
-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
-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
- ⑤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

20.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법치국가적 요구의 후퇴 | ② 제3자의 지위약화 초래 |
| ③ 행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 곤란 | ④ 행정의 능률성과 탄력성 제고 |
| ⑤ 국민의 권익구제 충실기능 | |

21.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인의 공법행위도 기본적으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.
- ②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.
-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개별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-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의하여 또는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.
- ⑤ 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다.

22. 다음은 어떤 이론과 관련되는 사건, 판례 및 용어이다. 이 이론은 무엇인가?

가. 일본의 砂川사건(1959년)

나. 미국의 Luther v. Borden

다. 사법부자제설

라. 고도의 정치행위

마. 국왕의 대권행위

- ① 통치행위

- ② 행정처분

- ③ 신뢰보호의 원칙

- ④ 비례의 원칙

- 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

23.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가도 가능하다.
- ② 기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가 있어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.
- ④ 신청을 전제로 한다.
- ⑤ 무인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
24.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, 처분의 집행, 절차의 속행으로 이 경우 처분은 본안의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.
- ② 집행정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
- ③ 불허가처분·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.
- ④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.
- ⑤ 판례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.

25.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|
| ① 정지조건 | ② 부담 |
| ③ 철회권의 유보 | ④ 기간 |
| 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| |